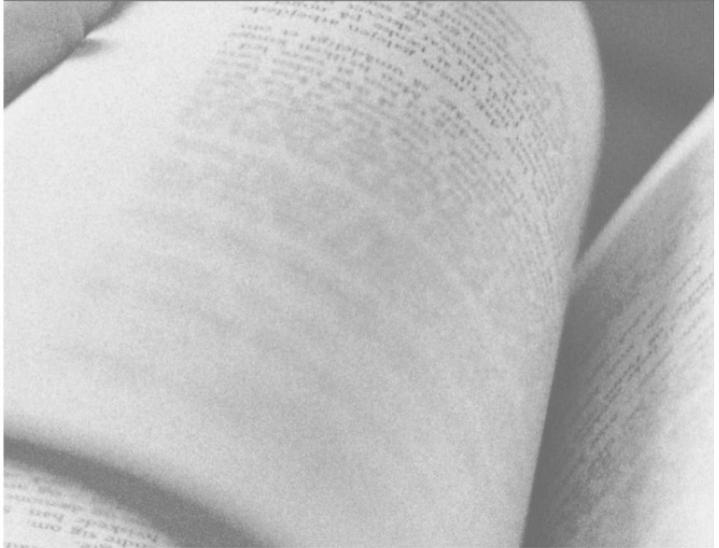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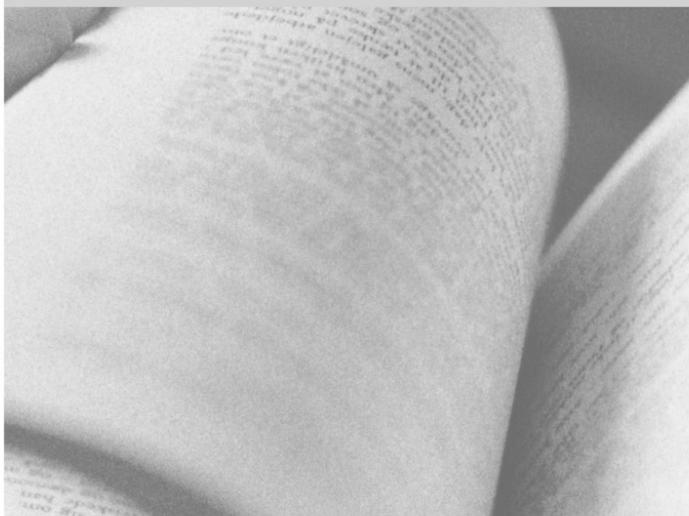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06-09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통일연구원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인 쇄 2006년 12월 29일

발 행 2006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6-09)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91-0 93340 : 비매품

340.911-KDC4

320.95193-DDC21

CIP2006002937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 미 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6
II. 김정일체제 선군정치와 담론구조와 전략 .....	11
1. 선군정치와 담론구조	11
2. 선군정치와 정치전략	31
III. ‘선군’ 담론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정세인식과 대응 .....	41
1. 정세 인식	41
2. 최근 북한의 정책 방향	56
IV. 북핵문제의 인식과 북한의 대응 .....	67
1. 북한의 핵문제 인식과 대응전략	67
2. 2차 핵위기와 북한의 전략적 목표	75
V. 결론: 북핵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과제 .....	87
참고문헌 .....	93



##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공식적인 정치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지도부가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했다. 2002년 10월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는 이미 1994년 제네마회담 이후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북·미 간의 상호 불신과 안보딜레마가 초래한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세계 각국의 경고와 유엔의 대북결의안 가결 등 주변국들의 강경대응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면서 6자회담의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북핵문제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다.

최근 북한당국에 의해 촉발된 핵문제와 미사일발사 문제들이 단순한

힘의 과시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북한이 인식한 정세판단에 따른 나름의 대응양식이라는 북한당국의 정책결정 요인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북한당국이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북한당국의 정책의지와 정책 목표를 이해하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스나이더(Richard C. Snyder)가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을 논의하면서 한 국가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외부상황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문제의식은 북한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북한당국의 정책결정 역시 있는 그대로의 외부 상황이 아니라 북한당국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최근 김정일 지도부가 생산해낸 정치담론을 통해 북한당국의 정세인식과 대응양식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원인과 성격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김정일의 정치담론, 그 중에서도 선군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앞선 김일성 정권과 마찬가지로 체제정당화를 위한 담론정치에 주력해 오고 있다. 특히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은 ‘선군정치’, ‘총대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치담론들을 생산해내면서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구축을 꾀하고 있다. 현재 북한사회에서 선군담론은 정치방식으로서의 ‘선군정치’, 경제방식으로서의 국방공업우선의 ‘선군경제건설로선’, 사회통합이념으로서의 ‘선군사상’을 통해 북한사회의 새로운 에토스(ethos)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사회의 에토스가 ‘주체’였다면 김정일 승계 이후 ‘선군’이 북한사회의 새로운 ‘에토스’로 등장하여 북한사회에 그 규범적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선군정치의 등장은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군’담론에 대한 분석은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과 그 대응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선군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쟁점별로 크게 3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로는 선군정치의 권력구조적 특성에 관한 문제로서 군의 위상변화와 당·정·군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당·정·군의 관계와 군의 위상변화에 관해서는 대립적인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그것은 선군정치의 영향 하에 군 우위로 당·군관계가 변화하였다는 입장이며,<sup>1</sup> 다른 견해는 선군정치의 구조 하에서도 군에 대한 당의 영도적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며 군의 위상변화도 일정한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2</sup> 최근 연구의 경향은 후자의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당·군관계와 관련하여 정성장은 국방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당의 영도 하에

---

<sup>1</sup> 김성철,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로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2000).

<sup>2</sup> 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년),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8권 1호 (2005); 조영국,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2006).

있다는 것을 명시한 1998년 개정헌법 11조를 근거로 하여 군에 대한 당의 영도적 지위는 현재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한편 군의 위상변화와 관련하여 최진욱은 군의 위상 강화에 따라 군수산업, 군사, 안보 등 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군의 정책적 영향력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군부의 전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며, 그 근거로써 군부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는 군 관련 문제에 관해서 김정일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sup>4</sup>

두 번째 범주로는 선군정치의 정책적 함의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 선군정치의 대내외적 정치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선군정치의 대내정치적 측면은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대외정치적 측면은 억지력확보와 대외협상력 제고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갑식은 선군정치의 발생사를 ‘고난의 행군기’ → ‘혁명적 군인정신’ → ‘선군정치’ 라는 구조로 설명하며 선군정치가 갖는 경제전략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체제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만들었으며 혁명적 군인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제도화가 바로 선군정치라고 보고 있다.<sup>5</sup>

마지막으로 ‘선군사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한 논의로써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가,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데올로기인가에 관한 상반된 논의들이 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서 있는 이기동은 선군사상은 이미 일색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론적 체계화

3-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pp. 99~101.

4-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p. 21.

5-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pp. 9~33.



작업이 주체사상의 이론화 작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6</sup> 이에 반해 광승지는 선군사상을 비롯한 김정일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상황변화에 적응하며 주민통합 체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변용담론으로 보기보다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sup>7</sup>

1998년 북한사회에서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뒤 우리 학계에서도 선군정치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몇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공론화된 지 7~8년을 지나는 길지 않은 시간적 제약조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주체사상이 그러했듯이 북한의 선군정치와 선군사상도 그 용어가 출현한 이후 이론화 작업이 순차적으로 수반되어 오면서 구체적인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선군담론은 그 의미영역이 점차 확장되며 북한사회의 규범적 어휘(normative language)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과정에서 출발하여, 선군정치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함의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군정치’ 등장 이후 북한사회의 선군담론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정권의 정세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군정치에 관한 특정한 쟁점에 주목하는 대신에 북한사회가 생산해낸 정치담론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

6-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우영 외,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통일』 (서울: 한울, 2005), pp. 166~167.

7-광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 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2000), p. 138.

현재까지도 진행형에 있는 선군정치의 담론구조를 밝히고 그 안에 내재된 북한정권 지도부의 정세인식과 대응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북한정권 지도부의 정세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북한사회에서 생산해낸 정치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데올로기가 그 특유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은 담론을 통해서다.<sup>8</sup> 담론은 언어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이데올로기 영역의 부분이다. 다시 말해 담론이란 이데올로기의 존재양식인 것이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정향과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연구의 방법으로서 담론분석의 방법은 여전히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정권 수립 초기부터 전통적인 ‘정치사업’의 방식에 입각하여 인민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정치담론들을 생산해 왔다.

북한의 정치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정치담론이 갖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북한사회에서 정치담론은 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일원적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사회에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과 국가가 생산해낸 공식담론 이외의 대항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sup>8</sup>-Olivier Reboul,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 41.

일반적으로 담론들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즉 담론의 영역은 동질적이지 않다. 대답하는 담론들에 관심을 기울인 바 있는 뻬쎬(M. Pécheux)는 낱말, 표현, 명제 등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sup>9</sup> 그러나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지도 체계의 구축은 언어의 독점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후 북한사회에서 담론의 영역 내 그 의미들 간의 갈등과 투쟁의 동학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북한사회에서 언론매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식사회 내부에서도 당의 방침에 배치되거나 또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쓰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sup>10</sup>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발언된 ‘말’들과 문자화된 ‘글’들은 바로 당과 국가, 더 엄격히는 지도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9-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p. 187. Michael Pécheux, trans. Harbans Nagpa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London: Macmillan, 1982), pp. 55~60.

10- 북한사회에서 언어의 지배적 독점은 1960년대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서 1967년 ‘525교시’를 통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1> 북한의 정치담론 생산 경로

대상	역할	역할 근거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정치담론의 생산	· “수령은 모든 사상, 이론, 정책을 제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가”
지식인	정치담론의 해석 및 담론의 권위 부여	· 1967년 5·25 교시를 계기로 지식인의 자율성은 원천적으로 소멸 · 지식인은 당·국가의 공식담론의 방조자, 해석자의 역할
대중매체 (신문·방송)	정치담론의 확대 재생산	· 언론은 당 정책의 선전자의 역할을 하며, 당·국가·사회비판의 영역이 전무 · 신문의 목적: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임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

다음으로는 북한의 정치담론에 부여된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특성이 다. 기본적으로 정치담론이란 정치적 권력과 그 행사방식을 합리화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사된다. 따라서 정치담론은 강한 이데올로기성과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의식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푸코의 견해에서 드러나듯이 담론의 장은 현실의 장과 일정한 상호관계에 놓여있지만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up>11</sup> 더욱이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담론이 지배하는 북한의 경우 그 불일치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담론의 장은 현실에 대한 경험질서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sup>12</sup> 특히 ‘선전선동’과 ‘인민대중에 대한 설복’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북한의 정치담론에는 정권지도부의 현실인식과 희망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진술

<sup>11</sup> 이정우, 『담론의 공간-주체철학에서 담론학으로』 (서울: 민음사, 1994), pp. 164~166

<sup>12</sup> 전미영, “북한 지배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사회주의·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학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2001), p. 234.

의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의 담론분석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북한의 정치담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평범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은유와 상징, 현실인식과 소망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 선전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표면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적 논리와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담론의 언어컨텍스트(linguistic context)를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sup>13</sup> 즉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의 계기와 그 의도를 추적함으로써 그 담론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의 발언 및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분석자료가 갖는 주관성을 가능한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식의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김정일의 담화문집인 『김정일선집』과 북한지식인들이 생산해낸 이론서적 및 북한의 대표적 학술지 『철학연구』와 『김일성대학학보』, 그리고 공식담론의 재생산 경로인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의 언론매체 등 정치담론의 생산경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과 북한 사회의 다양한 필자들의 문헌들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김정일 체제의 10여 년 동안의 주요 정치담론에 대한 분석은 북한

---

<sup>13</sup> 발언의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행위의 총체로서 텍스트를 다루어야 하며 텍스트의 지배적 컨텍스트를 통해 텍스트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컨텍스트란 발언의 언어적 관습으로서 일련의 저술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언어적 용례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언의 문법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념과 가치체계 등 언어사용의 관습을 지칭한다. Quentin Skinner, "Social Meaning and the Explanation of Social Action," James Tully(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1988), p. 94 참조.

지도부의 정세인식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정책대응 방식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 김정일체제 선군정치의 담론구조와 전략

## 1. 선군정치의 담론구조

### 가. 선군정치의 기원

북한사회에서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 “완성된 사회주의 정치방식,” “만능의 보검” 등으로 불리는 ‘선군정치’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정의된다.<sup>14</sup>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에 따르면 선군정치의 시작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술 초소’를 찾아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려는 ‘선군정치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며, 1995년을 선군정치의 시작으로 공식화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sup>14</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27.

<sup>15</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48.

그 시점이 1994년 10월경으로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1994년 10월 김정일의 연설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sup>16</sup>

선군담론의 개념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1997년 정초 담화를 통해서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여러 나라들이 총 한방 쏘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대표적 상징문구인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sup>17</sup>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나타나는 선군담론의 용어 변화는 북한의 선군정치 담론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서 선군정치도 군사우선의 혁명 전략을 당면한 현실에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개념이 새로 만들어지고 담론의 틀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

<sup>16</sup>- 김철우는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에서 “김정일장군께서는 1994년 10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정치철학을 천명하시고 이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p. 264). 그러나 김철우의 책이 출간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대부분의 북한의 문헌들은 1995년 1월을 선군정치의 기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4년 설은 공식적인 북한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1월을 선군정치 10돌로 기념하였다.

<sup>17</sup>- 김정일, “올해에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7.1.1),” 『김정일 선집』 14권, p. 267.



<표 II-1> 공동사설에 나타난 ‘선군’ 관련용어 변화과정

연도	구사된 ‘선군’ 관련 표현 및 어휘	새로 등장한 용어 (* 『로동신문』에 처음 등장한 시기)
1995	‘인민군대 강화’, ‘정치군사적 위력’,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 확립’	
1996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 확립’	
1997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 위업 완성의 주력군’, ‘우리당의 균중시 사상’	“혁명의 기둥”, “혁명주력군”
1998	‘혁명군대는 혁명주력군’, ‘인민군대는 우리식 사회주의 기둥’, ‘혁명적 군인정신’	“혁명적 군인정신”*(1996)
1999	‘혁명주력군’, ‘군민일치’, ‘선군혁명령도’	“선군혁명령도”*(1998)
2000	‘총대중시사상’, ‘선군정치’	“선군정치”*(1998), “총대중시”
2001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선군정치’, ‘선군로선’, ‘선군혁명령도’, ‘선군혁명’	“선군로선”
2002	‘군대제일주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	
2003	‘선군정치’, ‘선군로선’, ‘선군기치’, ‘선군사상’, ‘선군령도’	“선군기치”, “선군사상”*(2001)
2004	‘선군의 기치’, ‘선군혁명’, ‘선군시대’, ‘선군사상’, ‘선군사상교양’	“선군시대”, “선군사상교양”
2005	‘선군정치’, ‘선군시대’, ‘선군혁명령도’, ‘선군혁명총진군’, ‘주체의 선군사상’, ‘선군사상교양’	“선군혁명총진군”
2006	‘선군조선’, ‘선군정치’, ‘선군시대’, ‘선군혁명총진군’, ‘선군사상교양’, ‘선군철학’, ‘선군위업’	“선군철학”, “선군위업”

위의 표를 통해 보면, 선군담론의 특징적 용어들이 언급된 시기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혁명적 군인정신’ ⇨ ‘선군혁명명도’ ⇨ ‘선군정치’ ⇨ ‘선군로선’  
⇨ ‘선군사상’ ⇨ ‘선군시대’ ⇨ ‘선군철학’

‘군사선행의 방식’에서 ‘선군정치’라는 구체적인 정치형태로 담론체계가 자체 성장해 나감에 따라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은 선군정치의 기원과 발생 연원 등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마련해야 했으며, 2000년 이후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선군정치의 논리적 틀이 만들어졌다.

북한당국은 선군정치가 하나의 정치방식으로 완성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이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혁명의 개척기’에 있다고 정리한다.<sup>18</sup> 즉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김일성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노선을 김정일이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김일성주석님의 군중시사상과 그분의 선군혁명명도 업적과 경험, 고귀한 투쟁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일관하게 견지해 오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고립압살 책동이 더욱 우심해 지는 엄혹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군정치를 펼치시었다.<sup>19</sup>

북한당국은 선군정치가 김정일에 의해 구체적인 정치형태로 발전되었지만, 그 기원은 이미 김일성의 혁명전통에서 출발된 것으로서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구축한 ‘총대중시’의 ‘군사선행’ 사상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 의해 뒷받

---

<sup>18</sup>-『로동신문』, 2001년 12월 21일.

<sup>19</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22.



침되는데, 북한의 혁명과정이 “선행사회주의와는 달리, 당과 국가를 창건하기 이전에 무장부대인 항일유격대를 먼저 창건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즉 북한의 혁명역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이며, “군 건설과 혁명투쟁 전 과정이 완전히 독자성을 견지한 특수한 역사”로서 당보다 군이 먼저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혁명의 역사적 로정을 돌이켜 보아도 언제나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이전 소련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무력을 먼저 창건하시고 그 무력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당을 창건하시었습니다.<sup>20</sup>

물론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조선공산당의 창당역사는 이미 1920년대에 시작되었고, 해방 후 북한공산당 시작이 그 조선공산당의 ‘북조선분국’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자못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운동사를 포함한 근현대사는 ‘혁명력사’로 새롭게 정리, 이론화되었으며,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시작된 북한 현대사의 출발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를 지나오면서 ‘혁명력사’ 이외의 공산주의운동사나 김일성의 중소 공산당과의 관련성 문제 등은 북한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인식체계 하에서 인민군대가 당보다 먼저 창건되었다는 북한식의 주장이 큰 무리 없이 제기되고 또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sup>20</sup>-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선집』 14권, p. 293.

또한 이러한 군사선행의 원칙은 광복 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군사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sup>21</sup>

한편 선군정치의 기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북한은 선군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을 결합시킴으로써 선군 전통의 기원을 고구려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관계의 교훈을 보여준 역사적 경험으로 고구려 시대를 들고 있는데, 고구려는 군사를 중시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한 토대위에 국토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고구려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외세의 간섭이나 침략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였다. (중략) 고구려가 1천년이나 부국강병을 떨치며 외래침략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력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sup>22</sup>

이에 반해 구한말 조선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왕비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민족적 치욕까지 당하게 된 데에는 군사를 소홀히 하고 외세의존의 사대정치에 매달린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선군정치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민족사에게는 군사중시의 전통이 있었으며, 항일혁명투쟁 시기의 김일성에 의해 총대철학, 군사우선사상에 입각한 선군혁명영도에 의해 조국해방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김일성에 의해 세워진 이러한 군사우선의 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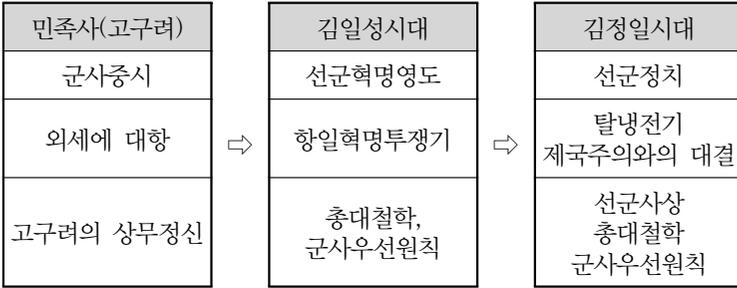
---

<sup>21</sup>-정만호,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2호 (2004), p. 4.

<sup>22</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p. 11~12.

혁명영도의 방식이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선군정치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II-1> 선군정치의 발생의 역사적 경로



즉 선군정치의 기원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북한사회에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군사중시사상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현하여 완성한 것이 ‘선군정치’라고 설명한다.

선군정치는 군사중시사상을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현하여 완성한 우리 식의 새로운 정치방식입니다.(중략)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책동에 주동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sup>23</sup>

구체적인 방식으로의 선군정치가 창조된 것은 “미제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으로 혁명이 최악의 역경에 처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김정일이 혁명군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의거할 때만

<sup>23</sup>-김정일,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2001.1.3),” 『김정일선집』 15권, p. 85.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선군장정’의 길에 올랐다고 한다.<sup>24</sup> ‘다박술 초소’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 이후 김정일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현지도의 단위수가 1,300개였는데 이 중 무력부분이 814개 단위에 이를 정도로 군사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켰다.<sup>25</sup>

김일성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선군혁명영도’가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 구축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선군혁명영도’의 방식을 계승하여, 국가기관체제와 사회생활분야에서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특한 정치방식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킴으로써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수립했다. 종전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다음 순이었다면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에 놓임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법적 지위와 구성, 임무와 권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주권기관들, 사법검찰기관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sup>26</sup> 이와 같이 군중시의 정치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군사선행이 구체화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자칫 군사정권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 북한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이집트의 군사총통제나 군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국가기구 자체를 군사

---

<sup>24</sup>-리금희,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 바탕으로 한 독창적이며 위력한 정치,” 『철학연구』, 2004년 3호 (2004), p. 17.

<sup>25</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48.

<sup>26</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23.

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 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역할을 규정했다는 데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sup>27</sup>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선군정치·선군사상과 주체사상과의 관계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의 담론화 작업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북한당국에게는 선군정치·선군사상과 주체사상 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우리학계에서도 북한에서의 선군담론 확산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 하나는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여전히 북한 체제에서 주체사상은 건재하며 선군사상이란 실천담론에 불과하다는 논의였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사회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말해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사회의 절대적인 유일사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선군사상’을 독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선군담론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2003년경에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sup>28</sup>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선군사상’에 관한 북한의 한 학술논문은 글의 서두에서 “주체사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

<sup>27</sup>-위의 책, p. 24.

<sup>28</sup>-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논의들이 등장한 시기는 북한사회에서 ‘선군사상’, ‘선군시대’ 등의 용어가 확산되는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에서 새로운 정치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주체사상과의 충돌의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이는 측면이기도 하다.

로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밝히면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즉 현대 북한은 ‘지도적 지침’으로서의 ‘선군사상’이란 순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매우 명확히 해명하고자 했던 점이기도 하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sup>30</sup>

먼저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 원리적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이며 선군정치가 내세운 근본 목적이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식대로 혁명을 해나가는 투쟁 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서 주체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정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정치로 되고 있다.<sup>31</sup>

그러면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은 어떠한 논증의 방법을 거치는가?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서

<sup>29</sup>- 허철수,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 『김일성 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판)』, 50권 3호 (2004), p. 2.

<sup>30</sup>- 최성학,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 (2001), p. 12에서 김정일교시 재인용.

<sup>31</sup>- 김룡진,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철학연구』, 2004년 2호 (2004), p. 10.



출발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이 그 중심 명제로 등장한다. 즉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나가고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혁명무력을 가지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며 이로부터 선군의 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식대로 혁명을 해나가는 실천투쟁 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원리”<sup>32</sup> 라는 주장이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중시하고 선행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그 사상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혁명이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만큼 강한 혁명무력에 의거하여야만 혁명투쟁에서 자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군정치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중심 고리를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두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능력, 창조적 위력을 높이고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 높여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인민대중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는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선군정치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방법을 견지할 데 대한 주체의 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정치라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자면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과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

<sup>32</sup>-최성학,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 (2002), p. 12.

이렇게 되자면 군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설명은 다분히 첫 번째의 이유와 동어 반복적이며 그 개연성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주성의 개념은 실제로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그 1차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선군정치의 이념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체사상을 선군정치의 사상적 뿌리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군사상과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실제로 북한의 선군담론의 진술 양태들을 주목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선군정치’와 ‘선군사상’과의 관계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선군정치’의 내용으로 설명되었던 동일한 언설들이 ‘선군사상’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선군관련 담론들의 전개과정에서 ‘선군정치’라는 키워드에 비해 ‘선군사상’의 키워드는 언급 빈도가 낮고 선군정치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sup>33</sup> 그 표현방식도 ‘선군사상’, ‘선군혁명사상’ 등이 혼재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사상’으로까지 언급하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김정일 시대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로 성장되어가는 맹아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

33- 앞의 <표 II-1>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군사상이 『로동신문』에 등장한 것은 2001년이지만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된 것은 2003년에 이르러서였으며, 이후 공동사설에서 언급된 회수를 보면 2003년 1회, 2004년 4회, 2005년 5회, 2006년 1회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사상에서의 주체 확립’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 간 주체사상의 담론화 과정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군정치’를 언급할 때는 아주 명확히 김정일의 정치방식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선군사상’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선군사상’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 김정일의 사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아직도 유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과정에 우리의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를 내놓으시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더욱 심화발전 시키시었다.<sup>35</sup>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완성하신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로부터 전개되고 체계화된 위대한 사상이다.<sup>36</sup>

앞의 <표 II-1>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 ‘선군사상’이라는 용어가 신년공동사설에 등장한 것은 2003년이지만 로동신문에 등장한 것은 2001년도 4월이었다. 그 최초의 것은 2001년 4월 9일 “장군님 계시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되신 8돛에 즈음하여 불패의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승리자들의 대답)”라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5일 “위대한 선군사상의 기치 따라 백전백승 떨치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사설에서는 선군사상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

---

35- 리선녀, “온 사회를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적적 요구,” 『철학연구』, 2004년 3호 (2004), p. 12.

36- 허철수,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제50권 3호 (2004), p. 2.

군사상과 연관 짓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선군사상’이 ‘선군정치’에 선행하는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군사상의 기치 밑에 군대부터 창건하시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을 밀고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특출한 위인상과 업적이 있다. (중략)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며 무적의 군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sup>37</sup>

‘선군사상’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후, ‘선군’, ‘선군정치’, ‘선군사상’, ‘선군혁명사상’의 내용들은 동일한 논리구조로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선군사상’과 주체사상의 관계 역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주체사상을 세계관적 기초로 하는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더욱 발전, 풍부화되고 있으며 선군혁명사상이 있기에 주체사상이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고 그 관계를 규정짓고 있다. 이후 선군사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는데, 2004년 12월 31일 개최된 선군정치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선군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삼화발전시키신 선군사상은 혁명의 총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데 대한 총대철학과 그것을 구현한 선군혁명의 원리와 선군정치방식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한 우리 혁명의 지도적 지침이며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백전백승의 혁명적 기치이다.<sup>38</sup>

---

<sup>37</sup>-『로동신문』, 2001년 4월 25일.

<sup>38</sup>-『조선중앙통신』,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선군사상이 이론적 틀을 완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군사상이 김정일 정권의 정치방식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증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선군사상교양’, ‘선군사상 일색화’를 사회적 정치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sup>39</sup> 최근 『로동신문』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개조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고 언급하며 선군사상에 대한 교양사업을 독려하고 있다.<sup>40</sup> 북한 사회에서 사상교양, 사상의 일색화 작업이란 그 사상을 전사회적으로 규범화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50~1960년대의 공산주의 교양, 1970~1980년대의 주체사상교양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사상교양체계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이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 다. ‘선군후로’의 혁명주력군 이론

‘혁명주력군’에 관해 김정일이 한 공식적 언급은 1997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전 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선군정치가 정치담론으로서 구체적인 틀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혁명주력군’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인 해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으며 북한당국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한다는 ‘선군후로’의 혁명

<sup>39</sup>-이와 관련하여 이기동은 북한이 선군사상을 전체사회에 일색화하려는 것은 선군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혁명수뇌부 결사옹위 정신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전체 인민들을 체제보위를 위한 전사로 만들고자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p. 159.

<sup>40</sup>-『로동신문』, 2006년 6월 30일.

주력군 이론을 새롭게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김정일은 혁명주력군 이론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정일은 선군정치인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이것이 선군정치의 독창성이라고 선언하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라는데 선군정치의 독창성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습니다.<sup>41</sup>

‘선군후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북한당국은 이 ‘선군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군후로라는 말은 선군대, 후로동계급 즉, 군대가 먼저이고 로동계급이 후차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대를 로동계급보다 앞세운다는 것이다.<sup>42</sup>

북한당국은 이것을 “그 어떤 기성이론이나 기존 공식에도 구애되지 않고 선행이론에 대한 온갖 교조적 태도와 수정주의적 왜곡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에”<sup>43</sup> 맞게 적용시킨 노력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면 ‘선군후로’의 새로운 혁명주력군 이론은 혁명의 주체를 노동

---

41-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혁명의 백전백승의 지치이다(2003.1.29),” 『김정일선집』 15권, p. 356.

42-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27.

43-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2003.1.29),” 『김정일선집』 15권, p. 359.

계급으로 보고 있는 마르크스이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김정일은 이것을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설명한다. 즉 19세기 중엽에는 노동계급이 자본의 지배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 혁명적 계급이었으며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공식처럼 인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세기 반 이전의 이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과 맞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이다.<sup>44</sup> 또한 선행이론에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정치적 역량으로 보지 못하고 한갓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수단으로만 보았으며 이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최대 약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45</sup>

현재 새로운 혁명주력군 등장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먼저, 노동계급의 혁명주체로 사회적 환경도 계급관계도 노동계급의 처지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20세기가 기계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 시대로 정보산업시대의 노동계급대열은 인테리화 되어가고 있으며, 노동계급의 생활적 기초도 달라져 노동자를 무산계급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지난날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게 된 것은 당시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부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혁명성, 조직성, 규율성이 가장 강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었지만 현 시기, 북한사회에서 조직성, 규율성, 사상성을 갖춘 집단은 바로 인민군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이 현재 혁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44-류제일, “선군사상에 의한 혁명의 주력군문제의 새로운 해명,” 『철학연구』, 2003년 2호 (2003), p. 26.

45-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사상』, 2004년 1호 (2004), p. 30.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도 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혁명의 주체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사명이란 자본주의 타파와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공산주의혁명론의 보편적 경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당국은 ‘혁명의 기본전선’을 ‘반제군사전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2003년 당시 북한의 혁명의 기본전선을 반제군사전선으로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 생명선으로 되었습니다.<sup>46</sup>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주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미제국주의’이며 제국주의의 강적과 직접 맞서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집단은 바로 인민군대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정치사상적 대결, 군사적 대결이자 힘의 대결로 설정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자주권은 오직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고수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된다.<sup>47</sup> 따라서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현실적 조건은 독점자본의 지배와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주력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46-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2003.1.29),” 『김정일 선집』 15권, p. 355.

47- 리창식, “반제군사전선은 선군혁명의 기본전선,” 『철학연구』, 2004년 1호 (2004), p. 12.

## 라.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총대철학

선군정치의 담론이 내용적 틀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총대철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선군정치는 총대철학을 그 철학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sup>48</sup>

2000년 신년공동사설은 “총대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당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총대중시는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기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시 해야 할 국사 중의 국사”로 선언되었다.<sup>49</sup> 이후 ‘총대중시사상’은 ‘총대철학’이라고 규정되는데, 총대철학이란 “총은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라는 것이며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 동지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철학”<sup>50</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총대란 “혁명적 무장력이며 그 기본은 혁명군대”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총대란 혁명군대를 포함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이 군대 우선과 군사선행의 정치방식이라는, 군대를 혁명주체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총대철학’은 무장력, 다시 말해 전쟁수행능력이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제1의 조건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대철학’은 선군

---

<sup>48</sup>-정만호,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p. 2.

<sup>49</sup>-『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

<sup>50</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57.

정치가 군사력강화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총대중시사상’이 갖는 단순한 논리는 북한식 담론구조가 그러하듯이 ‘철학’이란 명칭을 부여받음에 따라 ‘총대의 본질’, ‘총대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철학적 내용’을 갖추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당의 총대철학은 총대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어 나가는 혁명의 원리와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울 데 대한 선군중시원리를 새롭게 밝히었다.<sup>51</sup>

여기서 총대철학의 원리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하는 혁명의 원리’,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울 데 대한 군사중시원리’ 등 선군담론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 적용되고 있다.

또한 총대철학을 혁명이론에 수용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선행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거론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론에서는 총대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중요한 이론 실천적 문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총대를 혁명적 폭력의 최고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총대의 역할에 대해 단편적인 견해만을 내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또한 총대를 방위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총대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 힘을 넣지 못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며, 결국 사회주의의 체제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sup>52</sup>

이러한 주장은 ‘총대’ 즉, 군사력, 전투력의 강화를 통해서만 제국주의

<sup>51</sup>-오성일, 『우리당의 총대철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p. 4.

<sup>52</sup>-정만호,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p. 3.

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선군정치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또한 총대철학은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가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 2. 선군정치의 정치전략

### 가. 체제수호의 전략

북한 당국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선군정치는 1990년대 중엽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고립·압살책동”이 심해지는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작되었으며 고난의 행군시기에 완성되었다.

이 시기란 주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당국으로서는 체제의 붕괴를 우려할 만한 위기의 시기였다. 다음의 김정일의 언급은 당시의 북한지도부의 위기의식과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지도부의 의지를 짐작케 한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우리의 <붕괴>에 대하여 떠들지만 그것은 망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계속 전진하여야 합니다.<sup>53</sup>

북한당국의 현 시기의 사회주의위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

---

<sup>53</sup>-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선집』 14권, p. 295.

족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북한당국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지만, “당과 정권,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갖춘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안전만 수호된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았다. 즉 당시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당국에게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안전’, 즉 체제 유지가 가장 긴박한 사항이었으며 선군정치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군을 통한 체제수호의 전략은 “인민군대가 강해야 적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 나라들에서 총 한방 썩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군대를 강화 하는가 강화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지만 우리에게만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sup>54</sup>

즉 “군대가 있으면 설사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군대가 든든하지 못하면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의 전취물도 지켜낼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다.<sup>55</sup> 김정일은 2003년 연설을 통해 만약 군사를 소홀히 하고 군대를 강화하지 않았다면 “혁명은 고사하고 우리는 벌써 망한지 오래됐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체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군대의 역할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sup>56</sup>

54-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7.1.1),” 『김정일 선집』 14권, p. 267.

55-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21.

56-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혁명로선이며 우리혁명의 백전백승의기치이다(2003.1.29),” 『김정일 선집』 15권, p. 357.



## 나. 사회주의 발전전략

선군정치의 선차적인 문제가 사회주의체제 수호였지만 김정일 정권에게는 이에 못지않게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그 중요한 목표로 제기되었으며 북한은 군대를 경제건설의 핵심 역량으로 삼고자 했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단순히 무장한 집단으로만이 아니라 혁명의 기동, 핵심 역량으로 보는 주체적 관점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 전반을 밀고 나가는 특이한 정치방식이다.<sup>57</sup>

선군정치가 논리적 구성 체계를 갖추면서 혁명주력군이론을 제기한 데에는 군대를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대응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에 따르면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은 군대를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 조국보위 기능만을 수행하는 무장집단으로 여기고 군대를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군대를 물질적 부의 창조자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로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8</sup> 즉, 군대를 단순히 국가방위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이고 편견<sup>59</sup>이라는 주장에 입각하여,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정치가 바로 선군정치라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되고 당·국

---

57-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01년 2호 (2001), p. 6.

58-리봉찬,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당의 기본전략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4호 (2004), p. 5.

59-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p. 52.

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에 군의 참여는 불가피했다.<sup>60</sup> 김정일에 의해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언급된 이 ‘고난의 행군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북한당국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으며 인민군대를 이러한 돌파구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즉 김정일 정권 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사업에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데서 혁명군대를 앞세움으로써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당국은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만들어냈다.<sup>61</sup> 북한사회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것은 1996년부터였다. 당시 북한당국은 국토건설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건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며 이를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해 대중운동화하고자 했다.<sup>62</sup>

먼저, 건설과 생산의 현장에 인민군대를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일대 비약’을 일으켜가고자 했다. ‘고난의 행군시기’ 건설된 많은 생산시설들이 군대의 경제건설 업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sup>60</sup>-최진욱,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p. 14.

<sup>61</sup>-김갑식은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정리한 북한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16.

<sup>62</sup>-『로동신문』 지상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주제로 하는 기사가 실리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 한 해 34회의 기사가 실리고 있다. 대표적 기사들을 보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국토건설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1996년 12월 7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다시 한 번 영웅적 위훈을 세우자-안변청년발전소건설”(1996년 12월 27일)이며, 이후 1997년에 접어들면서 로동신문 지상에 실리는 ‘혁명적 군인정신’에 관한 기사는 100건에 달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에도 혁명적 군인정신은 “제품생산,” “중소형발전소 건설,” “가을걷이” 등 경제건설과 생산을 위한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닭공장, 메기공장, 타조목장, 즉석국수공장, 정세소금공장, 위생자기공장,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당국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자 했으며 조직동원이 가장 용이한 군인들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인민군대의 정신 기풍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에 확산 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사상재무장을 목표로 하였다. 즉 온 사회를 혁명군대의 모양으로 개조하여 나간다는 것을 사회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이었던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전 사회를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합법직적이었던 것처럼, 선군시대에는 그 본보기가 노동계급이 아니라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혁명군대’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간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sup>63</sup>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당국은 경제적 위기, 주민들의 사상 의식의 약화 등 체제위협요인에 대처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군대를 혁명주체로 내세우고 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 다. 김정일 리더십의 강화전략

선군정치는 김정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혁명 환경이 악화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던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일로서는 위기극복을 통한 지도력

---

<sup>63</sup>-허철수, “우리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침,” p. 3.

확보와 김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이라는 과업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며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얻고자 했다.

다음의 평가는 북한사회에서 정치리더십의 정통성 구축을 위한 선군정치가 갖는 의미를 잘 상징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선군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 적이 없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당의 독창적인 혁명노선이며 정치방식이다.<sup>64</sup>

1999년 6월 『로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논설은 선군정치 담론이 김정일 위대성의 한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논설은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은 “령도자의 특출한 자질”에 있는 것으로서 선군정치방식은 누가 모방한다고 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정치가”인 김정일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선군정치야 말로 김정일 동지의 걸출한 위인상이 집약되어 있는 위대한 혁명령도 방식이며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독특한 김정일식 정치방식이다.<sup>65</sup>

즉 주체사상의 창시자가 김일성이었고 주체사상이 김일성 리더십의 절대성을 보장하는 상징체계였듯이, 김정일은 자신의 리더십의 절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상징체계가 필요했으며 ‘선군정치’, ‘선군사

---

<sup>64</sup>-리봉찬,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당의 기본전략로선,” p. 2.

<sup>65</sup>-『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상'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상징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시대 북한사회의 에토스가 '주체'였다면 김정일 승계 이후 '선군'이 북한사회의 새로운 '에토스'로 등장한 것이다.

'선군'을 통한 김정일 이상화의 논리를 보면, 선군정치를 통해 나타난 김정일의 리더십을 "희세의 영장", "강철의 영장", "인덕의 최고사령관"으로 상징화하며 그의 능력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 "무비의 배짱과 담력", "탁월한 영군술", "철의 신념과 의지", "견결의 원칙성", "무한한 헌신성", "혁명적 낙천성", "수령에 대한 불변의 충성", "혁명적 의리" 등으로 칭송되고 있다.<sup>66</sup>

또한 '선군후로'의 혁명주력군 이론 등 선군정치의 이론들을 김정일이 새롭게 제기한 것으로 내세움으로써 혁명이론의 창시자로 승격하고자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일성이 북한사회에서 '인민의 아버지', '영원한 수령', '민족의 시조' 등으로 절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세대의 지도자가 아닌, '주체의 시대'를 창조한 '사상가',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로 이미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것이 지난 시기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해서 주로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주력군 문제를 논하던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제기한 "역사적 사변"으로까지 자평하고 있으며,<sup>67</sup>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을 김정일의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무오류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듯이 김정일 역시 주체사상의 계승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이론의 창시자로 승격됨으로써 김일성에 의해

---

<sup>66</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p. 276~374.

<sup>67</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28.

상대적으로 취약한 리더십의 절대화 작업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정일 리더십 강화와 관련한 선군의 전략적 역할로 군에 대한 지휘권 장악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체제전환기에 군대가 체제수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면서 군대의 중립화, 비정치화를 철저히 반대하며 군대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1989년 12월 21일 로므니아에서 개혁, 개편의 바람을 타고 반정부소요가 일어났다. (중략) 그러나 군부는 불복종 했다. (중략) 거꾸로 대통령이 체포되고 처형당하였으며 당도 사회주의정권도 다 무너졌다.<sup>68</sup>

따라서 선군정치를 통해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에 대한 통제력을 철저히 행사함으로써 체제전환기 군대의 이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기에 앞서 이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도 군에 대한 통제권 장악의 과정은 군대의 지위를 높이고 군대로 하여금 군대의 권위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sup>69</sup>

마지막으로는 군을 통한 김정일 호위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내외적으로 아직 취약한 리더십에 대한 방어기제로 군대 및 군인 정신을 이용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선군담론 확산과 함께 북한당국에서는 ‘일심단결’과 ‘수령결사옹위’

---

<sup>68</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2.

<sup>69</sup>-위의 책, p. 34.

를 강조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북한당국이 사회적으로 전 인민에게 확산 시키고자 한 ‘혁명적 군인정신’의 근본 핵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수령의 신변안전을 지키고 수령의 권위와 위신, 사상과 업적을 고수 빛내기 위함이라면 한 몸이 그대로 총 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되어 투쟁해 나가는 정신”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은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함께 ‘성새정신’, ‘방패정신’, ‘총폭탄 정신’ 등을 김정일 수호를 위한 새로운 정치상징으로 제시하면서 인민군대가 수령 일신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규범화하고자 했다. 또한 수령의 신변안전이 혁명적 군인정신의 첫째가는 임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비행기를 탈출하면 자기 한 몸은 살 수 있어도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 자폭의 길을 택한 하늘의 불사조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는 것도 적후의 한복판에서 단신으로 결사적으로 싸워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한 것도 우리 인민군인들이었다.<sup>70</sup>

북한당국은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영웅상을 창조하여, “길영조영웅,” “자폭영웅,” “육탄영웅” 등을 21세기 선군시대의 영웅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북한의 정치담론들에 나타난 이러한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들은 김정일 정권이 느끼는 신변위협 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수뇌부’의 신변보호를 군의 중요한 역할로 부여하고 있다.

<sup>70</sup>-허광섭,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 『김일성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1호 (2004), p. 17.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논의는 곧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사상’으로까지 격상되어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령결사 옹위에 관한 사상’의 본질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의 혁명적 수령관에서 제기되어온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충실성교양’이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규범화하는 논리였던 것에 반해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인민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수령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내용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 한 몸 바쳐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충실성의 정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결사의 각오”를 의미하는 ‘육탄정신’, 그리고 “수령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한 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성세정신·방패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1</sup>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사상’을 사회적으로 파급, 교양시킴으로써 김정일 지도부는 리더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후세인의 체포과정을 목도하면서 김정일 개인의 신변위협 의식은 상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김정일 지도부가 갖는 체제위기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여 군의 정권이반을 차단하는 한편, 군을 친위부대화 함으로써 군의 절대적 충성을 선군담론 속에 윤리화하여 김정일리더십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

<sup>71</sup>-김창경,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pp. 8~21.

# III

## ‘선군’ 담론에 나타난 북한당국의 정세인식과 대응

### 1. 정세 인식

#### 가. 혁명 환경 인식

20세기 말 북한이 직면한 체제 위기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체제전환에서 출발한다. 동구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노선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체제는 사회주의 붕괴의 도미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사회주의제국의 몰락이 북한지도부에게 가져온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김정일 정권의 정책방향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붕괴의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의 원인, 다시 말해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은 이후

북한이 선군정치를 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필연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김정일이 인식한 사회주의의 좌절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사상사업의 실패에서 찾아진다. 즉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는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어 사상전선이 와해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끝내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상이 왜곡 변질됨으로 사회주의가 방향을 잃고 자기 과도에서 탈선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sup>72</sup>

북한 당국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를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정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경제문제에만 주력하고 사상문제에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사상변질에 대해 기존 사회주의 정권의 사상정책이 부재했었던 점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사상변질을 촉진시킨 직접적 원인은 자본주의의 사상침투와 개혁·개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바람에 끌려들어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개혁>, <개방>은 망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추호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sup>73</sup>

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에 대한 북한의 원인분석 중

---

<sup>72</sup>-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 6. 19),” 『김정일선집』 14권, p. 51.

<sup>73</sup>-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1999.1.1),” 『김정일선집』 14권, p. 458.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바로 취약한 군사력이다. 즉 70년간 존재 하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가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진 것은 총대를 강화하고 총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sup>74</sup> 약화된 군사력과 군대에 대한 통제 상실이 체제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북한의 인식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소련방에서도 군대가 1991년 8월사변 당시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 데 관한 소련방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 배신자 옐친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시켰다.<sup>75</sup>

한편 북한지도부는 이들 국가의 군사력 약화와 군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원인을 당·군의 분리와 군의 비정치화, 자유주의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약화전략 중 하나가 집권당과 군대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작전의 결과,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군의 ‘비사상화’, ‘비정치화’를 외치며 군대를 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군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 1991년 1월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군사정치기관에 관한 총칙을 비준함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한다. 여기서 소련군대 총정치국은 대통령직속 행정기구로 개편되어 군내 당조직은 당생활지도나 정치사업은 하지 않고 군인들의 문화오락을 조직하고 시사보도나 알려주는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군대는 ‘붉은기’가 내려져도 적들을 향해 총

---

74-정만호,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p. 3.

75-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3.

한 번 쏘보지 못하고 체제붕괴를 바라보았다는 것이다.<sup>76</sup>

선군정치 담론들에 따르면 이 나라들에서 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렸었다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나. 국제정세 인식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형성된 세계체제의 세력관계는 북한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탈냉전기 세계체제의 세력분포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로 집약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경제호황에 힘입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켰다.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구소련의 붕괴 후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sup>77</sup> 탈냉전기 미국은 국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시켜왔던 북한으로서 이와 같은 탈냉전기의 국제질서는 매우 위협적인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인식하기에 “현재 미국을 대표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국제정치 전략이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정치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다가 나중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무참히

<sup>76</sup>-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pp. 79~80.

<sup>77</sup>-1998년의 경우, 전 세계 국방비 7,45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2,750억 달러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였다. 김재철,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p. 332 참조



짓밟아 버리는”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의 행위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 공인된 국제법도 통하지 않으며 군사 만능의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sup>78</sup>

북한당국이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된 데는 그들이 목도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의 영향이기도 했다. 북한당국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은, 1983년 그레나다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1989년 파나마침공, 유고슬라비아 사태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그리고 최근의 이라크 전쟁이 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sup>79</sup>

특히 북한당국은 이라크전을 지켜보면서 “타협에 의하여 획득한 평화는 단명한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나름의 ‘교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라크가 전쟁 전부터 미국의 요구대로 군사시설 전반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주권의 상징으로 되는 대통령궁전에 대한 사찰까지 허용하였지만 그것은 전쟁을 지연시키는 임시적 조치만 되었을 뿐 전쟁을 방지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sup>80</sup>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지금은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워도 어디에 가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때이다.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오늘의 조건에서 자체의 군력을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자기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다.<sup>81</sup>

특히 미국의 세계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

<sup>78</sup>-『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sup>79</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p. 15~16.

<sup>80</sup>-위의 책, p. 107.

<sup>81</sup>-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연구』, 2004년 1호 (2004), p. 30.

만약 미국이 어느 나라를 반대하여 어느 시각에 침략전쟁을 도발할 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up>82</sup>

미제와 반동들은 지금은 우리의 군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군사적 힘이 약화되기를 바라면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sup>83</sup>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자본주의 복귀의 길을 걸으면서 북한과 가졌던 거래를 거의 중단함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경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대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 ‘코콤’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인 통제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화했다. 특히 이러한 경제봉쇄는 관세정책과 국제금융거래 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일 지도부는 현재 국제적 역학관계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 핵전쟁억제력을 갖출 때에만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것은 인민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적인 인민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그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총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84</sup>

---

<sup>82</sup>-정길남,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은 선군시대의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2호 (2004), p. 15.

<sup>83</sup>-리봉찬,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당의 기본전략 로선,” p. 3.

## 다. 국내정세인식

김정일 정권의 출범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서 출발하였다.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화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외부의 체제위협요인 만큼이나 자체붕괴를 예상할 정도의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북한 지도부가 말하는 경제난의 원인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정책과 연이은 자연재해” 때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체제 내에 정책비판자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사회의 특성상 북한 내부의 문제 또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적’에게 찾는 것은 북한체제의 일상화된 대응양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게 닥친 경제난에서 외부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했다.

다음의 김정일의 발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 주고 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적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중략) 지금 우리 혁명의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되다보니 무엇을 하나 들여오자고 하여도 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화가 없이는 원유 1kg, 솜 1kg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3~4년 동안 연이어 보기 드문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sup>85</sup>

김정일 지도부가 느낀 또 다른 국내적 문제는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나가려는 당관료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

<sup>84</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122.

<sup>85</sup>-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선집』 14권, pp. 294~295.

1997년 1월 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김정일은 당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문제임을 토로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으로 인해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경제 지도일군들이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sup>86</sup> 즉 고난의 행군시기이니 할 수 없다는 자체위안에 빠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이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체위안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군들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 구실을 대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시, 군들에서 국수집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식량사정 보다도 일군들의 사상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sup>87</sup>

김정일 정권이 직면한 또 다른 국내정치문제는 경제회복을 위한 실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었다. 즉 북한당국의 대주민정책에서의 가장 큰 우려는 ‘고난의 행군기’ 남한과 자본주의세계의 무상지원과 교류의 과정에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와 이로 인한 사상의 변질에 대한 우려였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

<sup>86</sup>-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1997.1.24),” 『김정일선집』 14권, p. 277.

<sup>87</sup>-김정일,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1996.10.14),” 『김정일선집』 14권, p. 251.

주의자들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씩어빠진 부르조아 사상문화를 침습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부르조아 사상문화와 날라리풍을 절대로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자그만 현상이 나타나도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어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sup>88</sup>

북한당국은 체제붕괴 직전 소련의 자유화과정의 북한에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경각심을 드러내었다. 즉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9년 수십 년간 실시해오던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전파장애를 전면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았다. 당시 미국을 숭배하는 서적, 신문 등이 아무 여과 없이 흘러들어왔으며 반동적 작품들이 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때, “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이 구역을 일으킬 대신에 모방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임을 경고하였다.<sup>89</sup>

‘고난의 행군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1995년 김정일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지적하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협조>와 <교류>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침략과 간섭의 수단이며 반동적인 부르조아 사상독소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패 타락시키는 악랄한 와해 수법”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음의 김정일의 언급은 경제교류와 체제 단속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지도부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었다.

---

<sup>88</sup>-김정일, “올해를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2001.1.3),” 『김정일선집』 15권, p. 84.

<sup>89</sup>-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250.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 부르조아반동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화와 생활풍조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가기관들이 대외경제문화교류에서 사회주의원칙을 망각하고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망탕 조직하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며 사회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 엄청난 후과를 빚어 낼 수 있다.<sup>90</sup>

북한당국은 사상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들의 사상교양사업을 자본주의자들이 ‘획일주의’나 ‘사상주입’ 등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황당한 날조이며 부르조아 선전의 허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sup>91</sup>

한편 고난의 행군을 지나온 북한당국은 세계의 경제발전에 비해 낙후한 북한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세계경제와의 격차에 대한 인식은 북한당국의 위기의식을 갖게 한 또 다른 요소로 보인다. 2000년 신년사설을 통해 북한당국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한 걸음 더디면 백 걸음, 천 걸음 늦어지므로 경제 강국에 도달하려면 보통 속도로는 어렵없으며 단번도약, 단번비약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92</sup>

이후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으로서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선언하였다.

북한 당국은 대내적 체제안정화를 위해서 경제성장과 사상통제라는

---

<sup>90</sup>-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1995.6.19),” 『김정일선집』 14권, p. 77.

<sup>91</sup>-위의 책, p. 61.

<sup>92</sup>-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p. 73.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했으며 그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총대, 즉 군사력과 군사중시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총대는 제국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한편,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인민군대는 생산현장에서 건설을 주도하는 한편 혁명적 군인정신의 확산과 군민일치 문화를 조성하여 전 주민들에게 높은 사상성과 열의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의 체제 이탈 및 통제이완의 현실이었다. 김정일 정권은 정권승계 이후 악화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기아가 발생하고 탈북자들이 속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체제이탈과 통제시스템의 이완이 정권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북한지도부가 우려하고 대비하고자 한 것 중 하나는 주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인민대중의 지지가 정권 유지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군중노선을 실천해온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고난의 행군기', 주민들의 기아와 탈북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현실은 인민대중의 지지 상실로 인한 체제붕괴를 우려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를 통해 김정일의 연설은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드러내주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당이 군중 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군중우에 군림하여 군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라야 옳은 정치로 되며 실제적인 생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sup>93</sup>

따라서 인민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지도간부들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노동계급이 아닌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고 혁명의 제1기둥으로 내세운다는 사실은 인민대중의 지지상실까지를 염두에 둔 대내적 방어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일과 북한의 공식담론들이 누누이 언급한 바 있듯이, 경제가 무너져도 인민군대만 굳건하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지만 군대가 약화되고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면 체제는 몰락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정치적 실패로 인한 위기가 오더라도 군대라는 마지막 보루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방어전략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 라. 대남인식

2000년 6·15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당국은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sup>94</sup> 로동신문 사설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이 등장한 것은 2001년 3·1절 기념 사설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일·애국역량의 화합과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민족끼리 통일담론은 북한당국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자주통일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자주통일론이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주도의 통일전략이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이 전개되는 ‘우리민족끼리’ 통일론은 남북의 민족

<sup>93</sup>-김정일, “올해에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97.1.1),” 『김정일 선집』 14권, p. 261.

<sup>94</sup>-로동신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자!(2001.1.12),”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2002.2.10),” “부쉬행각 저지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2002.2.19)” 등의 구호문을 게재하면서 ‘우리민족끼리’ 담론을 전파하였다.



공조를 통해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자는 다분히 방어적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온 민족은 자기 힘을 믿고 통일운동실천에서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끼어들어 제 리속을 채우려는 외세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민족자주 역량의 공조와 연합으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sup>95</sup>

2001년 북한의 공화국정당, 사회단체들은 연초에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통일 문을 여는 해”로 지정하며 남북공동선언을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민족과 세계 앞에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라고 선언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해 민족공조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sup>96</sup> 2001년 1월 20일 미국의 부시정부 출범으로 북·미 간의 관계개선은 큰 차질을 보이게 되었다. 2002년 미국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북강경노선을 천명하자 북한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제의 반공화국대결책동과 새전쟁 도발책동은 현 부쉬행정부에 와서 더욱 로골화, 악랄화되고 있다. (중략) 미제호전세력의 북침광증은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로>와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대한 핵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미일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과 공조하며 외세의존과 민족의 영구분렬에서 살 구멍을 찾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sup>97</sup>

---

<sup>95</sup>-『로동신문』, 2001년 3월 1일.

<sup>96</sup>-『로동신문』, 2001년 6월 15일.

<sup>97</sup>-『로동신문』, 2002년 6월 25일.

북한당국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민족공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자 했다. 즉 “북과 남 전체인민들이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뜻과 의지, 힘을 모을 때, 미제가 발붙일 틈이 없게 된다”는 논리를 통해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할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적 담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선군정치가 미국의 북침을 막음으로써 조국통일의 전제인 평화적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신년 공동사설은 “민족자주 공조, 반전평화 공조, 통일에 국 공조”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민족자주 공조’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데에서의 공조를 의미하며, ‘반전평화 공조’란 미군철수를 포함하여 미국의 북침위협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처를 의미하였다. 북한당국은 북·미 간의 갈등을 미국과 한반도 간의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군사화전략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즉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당하는 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sup>98</sup>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선군정치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논리로 확대된다.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당국은 남북관계의 중단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로 군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한사회에서 우려하는 무력통일, 적화통일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에 대한 자위적인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평화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99</sup>

---

<sup>98</sup>-『로동신문』, 2005년 1월 1일.

<sup>99</sup>-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152.



선군정치가 한반도의 평화보장의 전제라는 북한의 주장 이면에는 현재 북한이 직면한 대남 경쟁력 상실을 군사적 우위확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놓여있기도 하다. 1990년대 소연방의 해체, 남한의 국제적 지위향상, 남한정치의 안정화, 그리고 전향적인 북방정책 추진 등의 대외정세의 악화와 북한의 경제적 위기 심화 등 3대 혁명역량이 악화된 상황으로 북한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세적인 대남정책에 임하였으며,<sup>100</sup> 북한은 이 시기에 이르러 ‘선 남조선혁명, 후 합작통일’로부터 ‘선 남북공존, 후 연방통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01</sup>

북한은 3대 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서 체제 수호차원에서 남북공존을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북한의 입장 변화에는 남한 주도하의 제도통일에 대한 우려가 깊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남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인식은 김정일 정권에게도 중요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남겨져 있다.

<sup>100</sup>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따라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존의 원칙에 대한 주장은 1989년 공화국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 1993년 4월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에서도 천명된 바 있다.

<sup>101</sup> 북한의 국가 목적이 최대목적에서 최소목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통일관도 적화통일에서 연방제에 의한 공존전략으로 전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개의 논자들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적화통일의 포기나, 유보냐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인다. 즉, 허문영은 탈냉전기 북한은 국가목표 순위를 최대목표인 ‘한반도 공산화’보다 최소목표인 ‘체제유지’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이것을 ‘단기 공존, 장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공존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적화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허문영, “통일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 p. 511). 이에 반해, 최완규는 대남정책의 실제적 목적이 적화통일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남북타협과 남한의 대북영향력 약화를 위한 남한사회의 균열확대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적화통일이 아닌 체제생존으로 국가목적이 전환되었음을 지적한다(최완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요인과 방향 연구, 1994~1998: 북한 국내정치와 대남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1998), p. 171).

미제와 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제도통일>을 하려고 꿈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미제와 반동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보장도,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sup>102</sup>

북한당국은 선군정치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남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제도통일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2. 최근 북한의 정책 방향

### 가. 군사력 강화와 핵무장

북한당국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정세 속에서 북한이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정책과정은 “군사전선에서 적을 제압하면 다른 모든 전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sup>103</sup>라는 신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탈냉전기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과제를 제국주의와의 투쟁으로 설정하고 제국주의의 피포위 의식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공격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체제생존 전략으로서 ‘총대 강화’, 즉 군사력 강화를 통한 핵억지력 구축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sup>102</sup>-오천일, “혁명의 총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0권 2호 (2004), p. 9.

<sup>103</sup>-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2003.1.29),” 『김정일 선집』 15권, p. 365.

총대강화를 위한 북한의 정책은 먼저 ‘국방공업 중시’ 경제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은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자위적 국방공업이란 군사강국의 물질적 기초로 정의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경제전략은 “국방공업 우선발전, 농업·경공업 동시발전 전략”으로 명명되어 선군시대에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경제건설 방향으로 설정되었다.<sup>104</sup>

북한당국이 군수공업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먼저, 국방공업의 발전이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수호’, 즉 체제를 보존케 하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은 조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질적 수요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절대적 규모의 무장력”이라고 보았으며 지금까지 북한체제가 미국의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국방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군대가 강해야 인민도 있으며 사탕보다 총알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큰 힘을 넣도록 하시었다.<sup>105</sup>

그러나 북한의 국방력과 국방공업은 매우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토로한다. 즉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방력, 국방공업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방공업의 발전이 전반적인 사회적 생산을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높이는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방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어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조건을

---

<sup>104</sup> 『로동신문』, 2003년 1월 1일.

<sup>105</sup> 정길남,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은 선군시대의 요구,” p. 16.

보장하여 줌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항시적으로 군사위협을 받고 있는 속에서는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없으며 경제적 봉쇄책동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06</sup> 즉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의 경제봉쇄를 타개하겠다는 것이 국방공업 우선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방공업’이란 군수부문의 생산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 전용으로 쓰이는 물건, 즉 무기, 탄약,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는 부문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국방공업이다. 국방공업은 나라의 자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물질기술적 수단을 생산보장하는 경제의 한 분야이다.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물자는 군수공업뿐만 아니라 민수산업에서도 생산된다. 국방공업은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모든 물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군사적 목적에만 전용으로 쓰이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종 무기와 탄약,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부문이다.<sup>107</sup>

즉 북한당국이 경제전략으로 선택한 국방공업 우선의 경제발전 전략이란 무기와 군사장비의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 다시 말해 총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국방공업 우선의 전략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국방공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의 관련부문들에서 국방공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 동력을 우선적으로 생산을 보장해주고

<sup>106</sup> -손영석,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2호 (2004), p. 39.

<sup>107</sup> -김원국,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적적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 (2004), p. 8.

국방공업과 민수생산부문들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방공업 우선의 전략은 북한이 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수많은 아사자를 양산했던 ‘고난의 행군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기’ 김정일은 군대가 강해야 당도 국가도 인민도 있으며 사탕보다 총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방공업에 큰 힘을 넣도록 했다.

우리의 국방력과 국방공업은 매우 비싼 대가로 이루어졌다.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방력, 국방공업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었다.<sup>108</sup>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해 왔으니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지 오래됐을 것이다.<sup>109</sup>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것은 인민생활이 곤란하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총대를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군사장비도 마음만 먹으면 팡팡 만들어 내는 굴지의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우리의 군사력은 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무력으로 역세어지게 되었다.<sup>110</sup>

---

<sup>108</sup>-정길남,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은 선군시대의 요구,” p. 16.

<sup>109</sup>-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1999.1.1),” 『김정일 선집』 14권, p. 457.

<sup>110</sup>-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p. 12.

## 나. 선군문화 확산을 통한 사상재무장

고난의 행군기 북한 경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력 이완 현상과 이후 경제 개혁조치로 인한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혁 조치 이후 자본주의화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상재무장을 위한 노력을 재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불가피한 외부의 지원 및 교류·협력과 체제단속이라는 양자 사이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화를 공짜로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략)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탄 속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들이 돈을 몇 푼 주겠다고 하여 거기에 절대로 유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학술대표단교류사업도 경각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sup>111</sup>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협조>와 <교류>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침략과 간섭의 수단이며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독소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부패 타락시키는 악랄한 와해수법입니다.<sup>112</sup>

1999년 신년공동사설은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위협을 경고하며 “사상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와해 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sup>111</sup>-김정일, “당무역 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1995.2.1),” 『김정일선집』 14권, p. 11.

<sup>112</sup>-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인 요구이다(1995. 6. 19),” 『김정일선집』 14권, p. 73.

북한당국은 ‘고난의 행군기’ 부진했던 사상교양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당원과 군인, 근로자들, 청소년들에게 ‘김일성동지 혁명역사도록’ 학습, ‘회고록’ 학습 등을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선군사상’으로 승격된 선군정치의 담론들을 ‘선군사상교양’이라는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선전·학습시키고 있다. 2006년 공동시설은 선군사상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어나갈 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사상사업의 순차와 공정에 맞게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학습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sup>113</sup>

또한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계급교양을 심화시키기 위해, 계급교양관을 새롭게 만드는 한편 신천박물관과 계급교양관에 대한 참관, 미제의 만행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혁명 3, 4세대에 대한 사상교양을 위해 전쟁시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114</sup>

특히 북한당국이 북한사회의 사상재무장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새로운 혁명의 주력군, 제1기둥으로 등장한 군대의 ‘혁명성’, ‘조직성’, ‘규율성’,

---

<sup>113</sup>-『로동신문』, 2006년 1월 1일.

<sup>114</sup>-『로동신문』, 2006년 7월 27일.

‘사상성’ 등을 전 사회에 전파시켜 사상전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배우기”라는 군중동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은 온 사회를 지배하는 혁명정신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사람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거세찬 비약의 폭풍이 일고 있다.<sup>115</sup>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자신의 인민군부대 방문 이유를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내가 인민군 군부대를 자주 현지지도하고 군대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는 것은 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과 전투적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기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입니다.<sup>116</sup>

북한당국은 광복 60돌을 맞아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다”라는 구호를 내고 선군사상의 무장을 통해 전 사회의 통합을 꾀하고자 했다. 북한당국은 “혁명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위력이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필승보검”이라고 선전하며 김정일 정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민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경제건설과 사회적 기강확립을 위한 전통적인

---

<sup>115</sup>-『로동신문』, 2006년 7월 19일.

<sup>116</sup>-김정일, “올해를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가는데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2001.1.3),” 『김정일선집』 15권, p. 87.



군중동원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계정신,” “라남의 봉화” 등 모범사례들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제2의 천리마”의 군중동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다. 민족공조론과 대남전략의 재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민족공조론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기치로 남북한 민족공조를 통한 대미항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신년공동논설에서 북한당국은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과 남의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이 남북화해분위기를 흐리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남북이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최근 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측은 남한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담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우발적이었다기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조국통일과 연결짓는 정당화의 내부논리였다. 즉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미제국주의의 북침을 막고 조국통일의 전제인 평화적 환경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sup>117</sup>이라고 선전해왔으며 “북,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선군정치를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북한당국은 민족공조론을 주장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북·미간의 힘겨루기에서 남한배제의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남북 당사자론에 입각한 평화조약체결에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남한의 주권이 사실상 주한미군에 장악되어 있고 유사시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조건하에서 남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

<sup>117</sup>-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151.

“실권도 없는 대리인과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무장을 해제한다면 그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sup>118</sup>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관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한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기존의 대남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한반도에 평화보장이 담보되지 않은 것은 남한당국의 태도와 적잖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한당국이 북·미 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이를 남북 간의 문제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남측이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 원칙’이 6·15공동선언의 첫 조항과 밀접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당사자원칙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미묘한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전쟁위협은 남북대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미대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큼 조·미 간의 전쟁포기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19</sup>

최근 북한당국은 민족공조론을 통해 북한당국은 남한과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공동사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면서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한에서의 반보수대연합을 구성하여 남한 내 보수 세력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략)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의 대연합으로 짓부셔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중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sup>120</sup>

---

<sup>118</sup>-위의 책, p. 135.

<sup>119</sup>-위의 책, p. 137.

<sup>120</sup>-『로동신문』, 2006년 1월 1일.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은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일관된 대남전략의 하나였다. 최근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해 초래된 남한 내의 신보수화 경향과 그로 인한 남한의 경제지원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 남한내부의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신보수화에 저항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군정치의 위력을 ‘민족통일의 보검’으로 선전하는 등 선군논리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남북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IV

## 북핵문제의 인식과 북한의 대응

### 1. 북한의 핵문제 인식과 대응전략

#### 가. 체제생존을 위한 자위권 추구

현재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2002년 10월에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북한핵을 전제로 한 북·미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1994년 제네바합의, 1999년 페리보고서 제출, 2000년 경수로 지연을 이유로 북한의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02년 2차 핵문제가 터져나오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그 기저에는 한국전 이후 북·미 간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의 발생 원인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압살 정책에서 촉발되었다고 주장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 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sup>121</sup>

북한당국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야기된 기원을 떨리는 미국이 1958년 남한에 첫 핵무기를 배치한 것에서 유래하며, 가까이는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이행의무를 포기하고 핵위협을 조장한 것에서 초래된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이다. 북한당국은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전략과 UN의 무력화로 인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며, 이것은 국제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 표현대로 ‘공격을 당해도 어디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상태’,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이후 미제국주의의 공격을 받아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로 인식하였다.

북한은 2002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위험을 초래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거나 같은 해 6월 웨스트포인트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자들이 미사일에 이런 무기를 탑재하거나 무기를 테러리스트 동맹국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단순히 봉쇄정책만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발언이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계획으로서 단순한 위협으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경제봉쇄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최혜국 및 적국관세’ 지역명단에 올려놓고 차별적인 관세를 적

---

<sup>121</sup> 『조선중앙통신』, 2005년 10월 25일.

용하였다. 그 결과 “일체의 상품이 북한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림으로써 북한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2</sup> 당시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서 몇 년째 연속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에 닥친 극심한 식량난, 연료난, 에너지난은 외부에서 북한의 붕괴론을 점치기에 충분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한당국은 제국주의세력이 북한이 1996년 5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5월 위기설’을 광고하며 사방팔방에서 목조르기를 시도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였다.<sup>123</sup>

미국의 공격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당국은 1차적으로 주력하였던 것은 민생경제 회복이 아닌 군사력 강화였다. 이것은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북한당국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북한은 “사탕보다는 총알,” 즉 민생보다는 무기생산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당국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도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고 미사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나. 북핵문제 진행과정과 북한의 전략

1차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당국이 학습한 ‘교훈’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군사적 위기조성이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되었다는 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하나는

---

<sup>122</sup>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50.

<sup>123</sup> - 위의 책, p. 51.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조약문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은 2차 핵위기를 유발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 온 것은 위기고조를 통한 미국과의 협상요구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정치외교적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타협 없는 원칙외교”라고 명명하며 북한의 타협 없는 원칙외교에 미국과 일본 등 어떤 대화상대도 다 타협을 하며 북한의 조건을 들어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24</sup>

1998년 북한의 핵의혹설이 증폭되기 시작되었다. 그것은 1998년 8월 17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행정부는 대북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본합의문의 보류도 어쩔 수 없다는 방침을 굳혔다.<sup>125</sup> 1998년 11월 9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이 관철되지 않으면 북·미 핵협정의 존립자체가 문제시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몇 차례의 회담 끝에 북한은 핵사찰단의 참관을 허용했는데 그것은 참관료를 바치는 대가였다. 북한은 3억 달러의 참관료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5억 달러 상당의 쌀을 지급했다.

핵시설 의혹과 함께 미국은 미사일 위협론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위성 발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북한당국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북한은 미국의 위기의식을 최대로 이용하였다. 북한은 19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

---

<sup>124</sup>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259.

<sup>125</sup> - 『朝日新聞』, 1998년 10월 21일.

호'의 발사를 미국의 핵전쟁을 억제할 강력한 물리력으로 인식시키고자 했다.

2001년 발행된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는 앞으로 미군이 갑작스럽고 기만적이며 비대칭적인 전쟁에 의존하는 적들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시의 2002년 연두교서와 핵태세보고서(NPR)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방위계획의 타겟으로서 북한을 지목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핵무기는 고사하고 북한이 소유한 전착발식 수류탄 하나라도 미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sup>126</sup>

북한은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 “외과수술식 타격이든 선제공격이든 그것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구상에 우리의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등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들이 결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sup>127</sup>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 <타격>문제에서 그것이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위에는 없다. 미국뿐이 아니라 그에 추종하는 한국군과 일본 역시 타격목표가 된다.<sup>128</sup>

미사일 발사 이후 1999년 9월 17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지난 50년간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

<sup>126</sup> -이유림·김용호, “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004), p. 256.

<sup>127</sup>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125.

<sup>128</sup> -『조선중앙통신』, 1998년 12월 2일.

제재를 가해 오던 미국이 일반상품들에 대한 무역과 농업, 광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상업용 선박 및 비행기들의 이용, 일부 금융거래를 허용하였다.<sup>129</sup> 1998년 8월 미 클린턴 행정부의 반응은 이전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1998년 8월 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미 클린턴 행정부는 이전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2000년 10월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북한권력 서열 2위인 조명록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에게 김정일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는 등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협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북한의 승리로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임시라도 중지시키는 것이 대조선 정책을 파산의 운명에서 구원하는 길이라고 본 미 행정부는 할 수 없이 굽어 들었다. 미국 측은 자기들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움직이겠다고 하면서 저들의 적성국무역법과 수출행정 관리법에 따르는 대조선 투자 및 무역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으니 이북이 미사일발사시험의 시한부중지 문제를 합의하는 데 동의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sup>130</sup>

한편 북한당국은 1999년 5월 미대통령 특사로 페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북한을 동아시아질서에 끌어넣기 위한 탈냉전시대 대북한 전략조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흥정’을 벌리려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김책 제4보병사단을 현지시찰 하였다는 보도를 했다. 지금껏 현지시찰보도 형식과는 달리 현지시찰 단위가 공개명칭으로 밝혀진 것은

<sup>129</sup>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46.

<sup>130</sup> - 위의 책, p. 45.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북한이 보낸 나름의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제4보병사단은 6·25전쟁 시기 서울전투와 대전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서 전승을 거둔 부대이며 미24사단을 괴멸시킨 부대였다고 한다. 미대통령 특사가 평양에 들어간 시각에 김정일의 현지시찰 부대명칭을 공개한 것은 미제에 대한 사소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고 한다.<sup>131</sup>

미국은 1999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페리를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과의 대결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다. 페리는 평양을 다녀온 후 바그다드나 베오그라드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국가로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미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페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페리보고서를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북·미대결에서 북한의 또 다른 “교훈”은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것, 즉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이었는데,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대가로 1000MWe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합의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94년 북미기본합의서가 조인된 이후에도 미국은 그 이행을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노골적으로

---

<sup>131</sup>-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p. 105.

드러내왔다.<sup>132</sup>

력사의 반동들은 일시적으로나 회유와 기만, 타협의 <유화정책>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동통치를 미화분식하고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에 불과하다. 혁명의 원수들은 제놈들의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고 제놈들의 지배주의적 지위가 뒤흔들리면 온갖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야만적 탄압과 폭압으로 줄달음친다.<sup>133</sup>

2002년 10월 25일 북한은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1994년 북·미기본합의문의 내용과 미국의 불이행 과정을 밝혔다.

첫째, 기본합의문 1조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흑연감속로와 그 연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으나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한 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초공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에 연간 100만kW와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kW의 전력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기본합의문 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합의문 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북에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 대신에 북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넷째, 기본합의문 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 양해록’ 제7항에 따라 북한은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

<sup>132</sup>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44.

<sup>133</sup> - 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p. 9.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북한이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 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합의문 4개 조항 중에서 미국이 준수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어떠한 의사도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그를 억제할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up>134</sup> 이러한 주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핵실험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를 미국의 제네바 회담 불이행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타협에 의하여 획득한 평화는 단명한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만반의 군사적 준비를 갖추는 때 가능하다”는 공격적 대응전략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즉 미국의 군사적 공격의 위협과 경제봉쇄는 북한당국이 선군정치 기치 아래 군사력강화에 전념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며 결국 북한의 핵은 김정일 체제를 보호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되었다.

## 2. 2차 핵위기와 북한의 전략적 목표

### 가. 2차 핵위기와 북한의 대응

2차 북핵문제는 2002년 10월 미대통령 특사 제임스 켈리의 평양방문

---

<sup>134</sup>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 122.

에서 촉발되었다. 켈리는 회담 열흘 뒤인 10월 17일 워싱턴에서 “북한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이 밝힌 북한의 발언은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측은 당시 핵개발을 시인했다던 강석주의 발언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부시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군대는 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다 부시정부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도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을 끌어들여 우리와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있다.<sup>135</sup>

이 미묘한 표현은 2003년 북한당국에 의해 다시 설명되었는데, “핵무기는 물론 더 강력한 무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sup>136</sup>

미국은 2002년 11월 14일 중유중단을 결정하고 12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했다.

북·미 양국은 서로 위기를 고조시켜 나갔지만 양자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이 마련되었다. 북·미 간 협상과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내용상에

---

<sup>135</sup>- 위의 책, p. 65.

<sup>136</sup>- 『조선중앙통신』, 2003년 8월 29일.

서는 불가침조약과 선택포기로 대립되는 쌍방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2003년 8월, 회담의 형식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여 다자 회담의 틀이 구성됨으로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5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폐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고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핵 문제는 위기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고, 6일 후인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벽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 주체95년 10월 9일 지하 핵 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방송하였다.

<표 IV-1> 2차 북핵문제 진행과정에서의 북한의 대응 및 발언

년도	북핵 관련 사건	북한의 대응 및 발언
2002	10.3 제임스 켈리 북한 방문	
	10.17 미 “북한 핵무기계획 추진” 발표	10.25 외무성대변인, “조미 간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발표
	11.25 KEDO집행이사회 대북중유지원 중단결정	12.12 외무성대변인,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 12.21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
2003	1.6 IAEA특별이사회, 북한의 핵동결 해제 원상복구 촉구 결의안 채택	1.10 정부성명, “핵무기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 - 1월 11일부터 효력 발생
	4.23 북·중·미 베이징에서 3자회담 개최	4.25 외무성대변인, “미국이 대북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 것”
	6.27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8.29 조선중앙통신,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 제시”
	10.20 부시대통령, 다자틀 내에서 대북안전보장 제의	10.25 외무성대변인, “서면불가침 담보 고려할 용의가 있다”
	11.21 KEDO 대북경수로사업 중단결정	12.9 외무성대변인, “말대말공양의 첫단계 제의-테로지원국 명단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중유·전력지원”
2004	2.25 ~28 제2차 6자회담 개최	
	4.7~8 한·미·일 3자협의 CVID 재확인	4.8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미국이 위협할 수록 조선의 핵억지력 강화”

년도	북핵 관련 사건	북한의 대응 및 발언
2004	6.23 ~26 제3차 6자회담	7.24 외무성대변인, “미국의 ‘전략적 제언’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미국의 제언은 리비아식 선택포기방식”
2005	9.13 ~19 제4차 6자회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11.9 ~11 제5차 6자회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 채택	2.10 외무성,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선언과 함께 핵보유선언 “우리는 미국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한 핵무기를 만들었다”  3.31 외무성비망록, “6자회담개최 조건과 명분이 마련되는 언제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다” 외무성대변인, “6자회담은 비핵화 근축회담이 되어야 한다”
2006	3.7 북·미 금융제재 논의 위한 실무접촉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 아니다”	1.9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진전을 원한다면 금융제재를 풀어야 할 것”

년도	북핵 관련 사건	북한의 대응 및 발언
2006		북 미사일발사 외무성대변인, “앞으로도 7.5 자위적억제력 강화의 일환 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 속 할 것”
	7.16 UN안보리 결의 1695호 만 장일치 통과	
	8.1 ARF, 북 미사일발사에 대 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 성명 채택	
	9.9 세계24개 금융기관 대북거 래 중단	10.3 외무성, 핵실험 계획 발표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 다”
		10.9 조선중앙통신,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고 성 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나. 북한 핵의 전략적 목표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북한의 핵실험이 끝내 기정사실화됨으로써 2차 북핵 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NPT탈퇴와 핵보유 선언,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2차 핵 위기의 진행과정은 돌이켜보면 이미 결과가 예상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단계별로 미국을 대상으로 위기조성과 협상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왔다.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북한이 의도했던 핵프로그램의 마침표를 찍었다. 핵실험이 이루어진 이틀 후인 10월 11일 북한당국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염원으로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중략)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보유를 실물로 증명해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sup>137</sup>

북한의 핵문제, 최소한 2차 핵문제의 발발과 진행과정, 그리고 핵실험에 나타난 일관된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적 생존전략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북한에 있어서 핵 프로그램은 체제존립을 보장하는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부시정권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로서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한 경제제재 완화와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체제전복 계획을 억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경제건설을 위한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자부심회복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권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북한은 2차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차 핵문제가 제기되었던 2002년, 김정일 정권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신년 공동사설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기’를 어렵게 극복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당·

---

<sup>137</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1일.

군·민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 정권지도부의 안도감과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조절개선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새로운 비약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듯이 부시정부의 ‘선제공격’에 대한 위협요인이 북한체제로 하여금 핵무장으로 나가게 한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2차 핵문제가 초래되었을 당시 북한당국의 전략적 목표는 군사력과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의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를 푸는 것이 당면한 목표였다고 보여 진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대북공격에 어느 정도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참여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칸반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진단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기환의 『민족과 선군정치』에서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남한 국방부의 자료와 1993년 미합동참모본부의 자료 등을 제시하며 미·북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의 인원손실이 3년간의 한국전쟁과 10년간의 베트남전에서 당한 손실보다도 클 것이며 이러한 손실이 미국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현재 가동하는 핵반응로들이 파괴되면 방사성물질이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이 심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클린턴이 당시 보고받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결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38</sup>

미국이 전쟁을 시도하기 힘든 또 다른 문제는 북한에 반격능력이 있

---

<sup>138</sup>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p. 94~96.

는 한 미국이 전쟁을 감행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석유화학제품의 거대한 집합체와 다른없는 미국의 도시들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적들의 공격위협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피해가 북한을 상회할 것이라는 인식이다.<sup>139</sup>

북한이 2002년 제2차 핵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파악했다.<sup>140</sup>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봉쇄 해제라는 목표를 향해 핵이라는 가장 확실한 대미 협상카드를 활용해 위기의 수위를 점차 높여왔으며 끝내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일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과 세계체제 내에서의 고립 상태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강성대국건설’을 김정일 정권의 사회주의 실천전략으로 내걸고 “단번도약”을 꾀해왔다. 그것은 북한체제의 내부적 붕괴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통치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 정권이 택한 비장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up>139</sup>-위의 책, pp. 117~118.

<sup>140</sup>-켈리-강석주의 회담 이후의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북측의 공식적 주장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보유를 구실로 이라크에 군사행동을 밀어붙인 부시가 2002년 10월 17일 백악관대변인을 통해 이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국방의 위력’으로 평가하며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p. 66~69 참조).

2003년 1월10일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의 울타리로 압박하여 북한을 질식시키고자 했는데 북한이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핵의혹으로 북한을 압박할 구실을 상실케 했다는 데서 북한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우선의 전략과 국방공업우선 정책을 통해 군사 강국이 되어 강대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선군정치의 정치전략이 그대로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BDA(방코델타아시아)의 자금동결을 비롯하여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통한 압박정책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시계를 조금 앞당겨 놓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1월 9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금융제재를 풀어야 할 것을 경고했다. 이 담화문은 당시 금융제재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반공화국금융제재는 피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 말살행위로서 공동성명에 밝혀진 호상존중과 평화공존원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제도이다.<sup>141</sup>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이란 국제사회의 고립과 동맹국과의 갈등이라는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와 압박정책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 이후 단기적인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북한당국은 앞으로 ‘또 한 번의 고난의 행군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각오가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제봉쇄와 제재, 국제적 비난을 극복해 내는 데 있어서 북한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나라도 많지 않은 까닭이다.

---

<sup>141</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10일.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놀랄 우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보다 더 암흑한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중략)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아무리 암흑한 시련과 난관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 하여도 원수들과는 사생결단을 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굳은 신념과 배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sup>142</sup>

대내적으로 북한사회에서 핵실험은 김정일 선군정치의 승리적인 결실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의 영도력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에게 있어서 ‘선군정치’란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이자, 정치리더십의 상징으로 최근 10여 년간의 북한사회를 규정하여 왔다. ‘선군’, 즉 군사선행의 기치 아래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통강냉이를 먹어가며’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다고 한다. 북한지도부가 스스로 여러 번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쉬운 결정일 수 없었을 것이며 북한지도부로서도 그것은 일종의 대단한 모험이었을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가기 위해 ‘총대철학’과 ‘선군사상’을 새롭게 이론화했으며 선군정치를 북한사회주의 발전사의 한 필연으로 위치 지으려 노력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선군의 논리아래 인내해야 했던 북한주민들에게 하나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작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이후 북한당국은 최소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핵실험 다음 날인 10월 10일 『민주조선』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는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여기서 “우리당의 선군정치로 하여 세계적 판도에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남김없

---

<sup>142</sup> -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자(2002.11.25),” 『김정일선집』 15권, p. 330.

이 과시되었다”고 선언하며 군사적 힘을 통해 강성대국에 진입하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강성대국으로 나가는 주되는 투쟁목표는 경제강국 건설로 설정되었다. 최근 북한은 강성대국을 “전체군대와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 “튼튼한 군사력을 가진 강위력한 군사강국,”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부강한 나라”<sup>143</sup>로 정의하고 있다.

---

<sup>143</sup> 『로동신문』, 2006년 11월 13일.

# V

## 결론: 북핵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과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하며 발 빠르게 대응을 모색해 나갔다.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이례적으로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여 위기처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북한은 외교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유엔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의 압력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계속 압력을 가중시키면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화과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sup>144</sup>

악화일로를 걷던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은 10월 31일 북·중·미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비공개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해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

<sup>144</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1일.

금융제재가 풀려야만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회담 직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음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틀 안에서 조·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sup>145</sup>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힐 차관보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의 주장을 통해볼 때 6자회담에서 금융제재의 문제들을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라는 데 대한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회담의 테이블로 돌아오기까지는 물론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강한 톤의 비난을 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경입장을 표명했으며 이후 유엔결의안 참여, 부분적 금융동결, 국경지역의 장막설치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원유지원을 비롯하여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북한의 핵이 목표했던 것은 위기의 극대화 뒤의 대미 협상이었으며 더 이상 파국을 원하지 않는 북·미 양국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명분을 마련해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고조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일정한 타협을 전제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핵문제 진행과정에서 북한이 보여 온 일관된 전략이기도 했다. 양자회담을 고집하던 북한이 다자회담방식에 가까운 3자회담을 수용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는 과정도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6</sup>

<sup>145</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1월 1일.

<sup>146</sup> -당시 북한당국이 이러한 북한 측의 양보를 대화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합리적인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통해 북핵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핵실험 이후 북한당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최종목표이며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sup>147</sup>고 밝힌 바 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정책을 거둬들이면 북한으로서는 핵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데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보장된다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핵무기를 갖게 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충분한 몸값을 과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미 핵실험 이후 북한은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조의 위기를 향해 치달던 북핵문제는 이제 외교적 해결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평화조성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민족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의 핵보유란 한반도에 비대칭적 안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

자세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에 ‘불가침조약체결’ 제의는 미국에 ‘삼키고 싶지 않은 쓴 약’을 제시한 고단수의 대안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pp. 131~134.

<sup>147</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8일.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의 재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물론 북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미 간의 갈등의 산물이지만, 핵실험 이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정부는 매우 무기력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 대북영향력 면에서 중국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대화채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북핵실험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미 간의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원인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법만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는 ‘북핵의 폐기’여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의 평화적 원칙과 목표로서의 북핵폐기라는 점을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대미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 미국과의 협력과 정책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의하여 북한에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

위를 조절하여 위기를 순화시킬 수 있었던 중국의 역할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에게는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과제가 안겨져 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정부는 비대칭적 안보환경 속에서 남북관계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벌써 “만약 남한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제재책동에 가담한다면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될 것”<sup>148</sup>이라는 위협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핵문제를 미국 대 남북 간의 대결로 주장해왔으며, ‘6·15정신’과 ‘민족공조론’을 거론하며 “외세냐 민족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해왔다. 즉 북한은 민족주의적 수사(rhetorics)를 동원하여 남한정부의 강경대응을 저지하는 한편, 북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논리 하에 철저한 남한 배제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 보면 김정일 정권 10여 년 동안 북한은 대미정책에 있어서도,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일관된 목표를 추진해 왔다. 체제수호 차원에서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남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사회 재건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일관된 목표를 위해 북한은 군사적, 외교적 또는 공격적, 방어적인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그 방향설정이 다분히 당위론적이고 비구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sup>148</sup>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25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성철. 『김정일의 퍼스널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정일. 『김정일선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김정일선집』 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김정일선집』 1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김창경. 『수령결사옹위에 관한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우리당의 총대철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3.
- 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최기환. 『민족과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3.
- Pêcheux, Michael. trans. Harbans Nagpa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London: Macmillan, 1982.
- Reboul, Olivier. *Langage et Ideologie*.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2. 논문

- 길춘호.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경제연구』. 2003년 4호. 2003.

-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 북한연구』. 8권 1호. 2005.
- 김광춘. “선군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확립과 공고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 『경제연구』. 2003년 1호. 2003.
- 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2001년 2호. 2001.
- 김룡진. “주체사상은 선군정치의 뿌리.” 『철학연구』. 2004년 2호. 2004.
- 김연수.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27집. 2003.
- 김원국.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 2004.
- 김재철.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세계질서를 둘러싼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 김주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과 미일군사동맹.” 『한국동북아논총』. 제4집. 2006.
- 김혁모. “선군사상은 공화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백전백승의 기치.” 『철학연구』. 2003년 3호. 2003.
- 류제일. “선군사상에 의한 혁명의 주력군문제의 새로운 해명.” 『철학연구』. 2003년 2호. 2003.
- 리금희.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이며 위력한 정치.” 『철학연구』. 2004년 3호. 2004.
- 리봉찬.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당의 기본전략로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4호. 2004.
- 리선녀. “온 사회를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 요구.” 『철학연구』. 2004년 3호. 2004.



- 리영섭. “선군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철학연구』. 2004년 1호. 2004.
- \_\_\_\_\_. “선군정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 『철학연구』. 2004년 3호. 2004.
- 리정철. “선군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불패의 기치.” 『철학연구』. 2004년 4호. 2004.
- 리창식. “반제군사전선은 선군혁명의 기본전선.” 『철학연구』. 2004년 1호. 2004.
- 박홍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 『경제연구』. 2004년 1호. 2004.
- 손영석.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4년 50권. 2004.
- 윤영광.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건.” 『철학연구』. 2002년 2호. 2002.
-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로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이우정. “북미간 핵협상의 전략적 환경과 대응체계.” 『한국동북아논총』. 29집. 2003.
- 이유림·김용호. “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1호. 2004.
- 이정철. “북핵의 진실 게임과 사족생의 선군정치.” 『현대북한연구』. 7권 1호. 2004.
- 전미영. “통일담론에 나타난 남북한 민족주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2003.

- 정길남.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은 선군시대의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50권 2호. 2004.
- 정만호. “우리당의 선군정치의 철학적 기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2호. 2004.
-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 조영국.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2006).
- 최성학.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 2002.
- \_\_\_\_\_.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 2002.
-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 2001.
- 최완규.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 변화요인과 방향 연구, 1994~1998: 북한 국내정치와 대남정책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안보학술논집』. 1998.
- 최진옥. “북한 선군정치의 정치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 최학근.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은 가장 철저한 반제자주사상.” 『철학연구』. 2003년 1호. 2003.
- 허광섭.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50권 1호. 2004.
- 허문영. “통일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

허철수.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학편)』. 50권 3호. 2004.

Skinner, Quentin. “Social Meaning and the Explanation of Social Action.” James Tully(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Princeton: University of Princeton Press, 1988.

### 3. 기타자료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상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중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 품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N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광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비매품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